CHUNG WOO
관세법인 청 우

Newsletter
Nov. 2014

Monthly Customs Newsletter

[대표관세사 인사말]

한해의 수확도 끝나고 어느덧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11월이 되었습니다. 커피와 함께 좋은 책 한권이 떠오르기도 하고, 고향의 부모님이 그리워지는 가을입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성과를 되돌아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지만, 가을의 끝자락을 맘껏 즐기는 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확대로 통관절차의 간소화 문제가 지난 10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구매물량 증가 대응을 위한 관세청 시스템 고도화 및 도로명주소 신고 제도 도입 등 향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금번 관세법인 청우의 소식지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관세 및 물류 동향, FTA / AEO와 관련한 최신 소식을 간추려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온 세상이 곱게 물들어가는 만추(晩秋)의 계절에 가족, 연인과 따뜻한 추억거리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 용 남

[관세동향]

▶ '해외 직구 통관절차 간소화' 놓고 의견 엇갈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월 14일 진행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접 구매에 관한 통관절차 간소화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외 직접 구매에 따른 해악이 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통관절차 간소화를 문제 삼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의 측면을 강조하며,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만큼 상황에 맞춰 관세청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탈세와 마약 밀수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해외 직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개인의 해외 직구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구매자가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예도 많다."고 해외 직접 구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최근 들어 해외 직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관련 단속 인력은 줄고 범죄 가능성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 역시 "해외 직구가 느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이 등장해 탈세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담당 인력은 늘지 않고 있다."며, "우범 물품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직구 물품에 관해서는 이 시스템이 고도화돼 있지 않아 앞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관세청이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가 불편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해외 직구를 하려면 구매대행 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밝혀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건이 3만 건이 넘었고 올해도 현재 1만 8,00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낙회 청장은 "내년 2월부터는 100%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며, "대체수단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번호 신청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 해외직구 국정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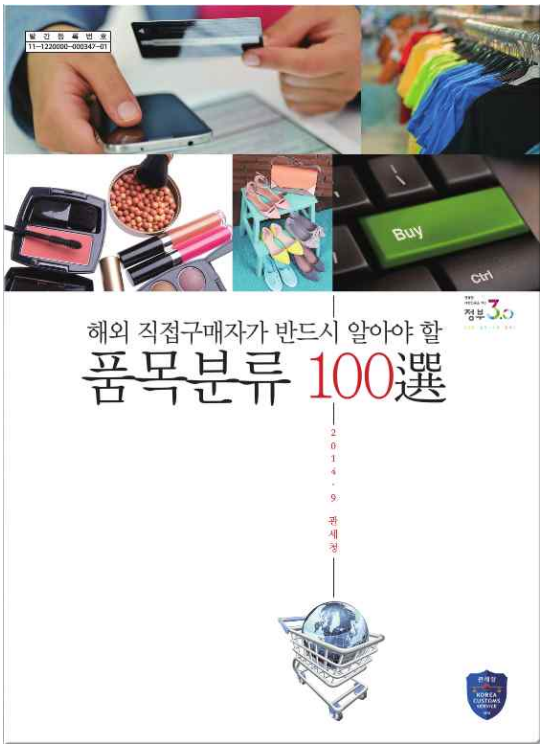
[관세동향]

▶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選 발간 안내

관세청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일명: 해외 직구)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품목분류·세율, 세액 계산법, 반품시 환급방법 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전자상거래로 가장 많이 수입되는 물품을 위주로 100대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모든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등재하여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일반 국민 소비자의 궁금증 해소 및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책(e-Book)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관세동향]

▶ 국내 가구업체 관세 차별... 관세청장 "역관세 존재 사실"

수입 가구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와중에 국내 가구업계가 수입하는 목재에는 역으로 관세가 적용, 국내 업체의 비용 상승을 부추겨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역관세 존재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가구업체와 목재업체 간 이해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0/24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구분야에서 불합리한 역관세가 존재한다. PB(파티클 보드), MDF(중밀도섬유판재)에는 관세가 있는데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3년 동안을 봐도 가구업체 수나 종사자수도 떨어지고, 매출규모도 하락하고 있다"며 "반면에 수입가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저가 가구가 수입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관세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2004년부터 국내에서 가구완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0%지만, 목재가구의 원·부자재를 수입하면 8%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도 세수문제나 조세정책 상황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겠지만, 제조업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역관세 부분을 포함해서 관세정책 지원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소위 역관세가 존재하는 거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가구업체와 목재업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만 관세청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다"고 주무부처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관세동향]

▶ 중국 법령정보, 이젠 인터넷으로 본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 시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중국 법령정보 시스템'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운영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중국의 법령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통지' 형태로 운영돼 그간 우리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기청과 중기진흥공단은 이와 같은 법률적 어려움을 없애고,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이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선별하고, 전문가의 번역 및 감수를 거쳐 세무·회계 관련 법령 2,91건, 헌법, 행정법, 경제법 등 일반법령 48건, 지방 법령 23건 등 총 3,712건의 법령정보와 중국의 사회보험, 노무제도, 이익처분 및 청산 절차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중국 투자지원기관, 진출 체크리스트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국어·한국어 동시 검색, 법령 제·개정 조기알림, 온라인 상담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중국어 및 한국어로 원하는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요 법령의 변경 사항은 메일링, 팝업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즉시 안내한다. 온라인 '법령상담실' 코너에서는 세무, 창업, 노무 등 분야별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도 들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서비스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진출하려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省)을 대상으로 지방 법령 및 관련 정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국 법령정보 시스템 주요 콘텐츠]

중국법령	일반법	헌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등
	세무/회계법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소득세, 수입세 등
	지방법(섬서성)	일반법 34건, 세법
중국진출 콘텐츠	기 진출기업	중국 사회보험, 노무, 세무, 회계, 이익처분 및 청산 절차 등
	진출 희망기업	해외투자 개료, 중국진출 체크리스트 및 노하우, 사례 및 유의사항, 중국 투자지원기관 등
	업종별 가이드	주요 제조업, 건축업, 의료업, 인쇄업, 요식업, 영화상영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별 진출절차, 관련 법령 등
헤설 및 문제해결		설서(법령, 관련 부처, 주요 쟁점), 사법 해석 및 판례 등

[관세동향]

▶ 바다건넌 분실·도난 휴대폰 급증...적발은 1년에 10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고가의 휴대폰이 해외로 밀반출되는 현상이 계속해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 실적은 1년에 10건에 머무를 정도로 저조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접수한 신고 건수는 총 126만건이었다. 이는 2012년 96만건에 비해 30만건이 늘어난 것이며, 휴대폰 절도건수도 3배 이상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휴대폰 밀반출 적발 실적은 2011년 5건, 2012년 21건, 2013년 17건, 올해 8월 기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분실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관세청이 적발한 휴대폰 밀반출 적발 실적이 저조해 국내에서는 쓸 수 없는 분실 휴대폰이 해외로 밀반출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 휴대폰 도난·분실 확인 시 경찰청에 수사의뢰(장물죄 등 수사 필요)키로 경찰청과 MOU 체결(2013년 5월), 휴대폰 주요 불법반출경로인 특송화물 X-RAY 검사 및 출국 보따리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에 경찰청과 MOU를 체결하고 휴대폰 주요 불법반출경로인 특송화물 X-RAY 검사 및 출국 보따리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관세청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와 올해의 휴대폰 밀반출 적발 실적은 턱없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고가의 최신 휴대폰들이 분실·도난 돼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관세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특송화물 X-RAY 검사를 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지켜낼 수 있는 관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스마트폰 밀반출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8	
휴대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33	21	507	17	659	6	19

자료 : 관세청

[관세동향]

▶ 다량의 수은을 함유한 중국산 미백화장품 적발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중국산 미백화장품에서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5,800배 초과하는 다량의 수은이 검출되어 전량 유치.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VISON' 크림에서 검출된 수은은 5,800ppm으로 허용 기준치를 상당량 초과했고, 다수의 같은 제품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은은 피부에 접촉 시 붉어지는 등의 부작용과, 장기간 노출로 인한 체내축적과 신경독성 문제 때문에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ppm 이하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기관에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유통단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FTA 뉴스]

▶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시행 준비 끝!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호주와 캐나다産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긴급관세조치 등을 담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을 담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 7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협정에 따라 이들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했다. 또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시작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도 정해 긴급관세의 부과 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호주 및 캐나다産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적용기간 등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하고, 캐나다와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로부터 10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호주와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추가했고, 캐나다와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했다.

또한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일시 수입물품 등 면세규정을 추가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신설했으며, 원산지 조사방법 등을 추가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페루와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도 개정했다.

[FTA 뉴스]

▶ 한·캐나다 FTA 정식 서명, 유망 품목은?

9월 23일 한·캐나다 FTA가 정식 서명됐다. 9년간의 긴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한·캐나다 FTA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시장에 대한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9월 23일 발표한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FTA 발효 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던 6~6.1%의 관세가 3년 내 철폐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용 고무타이어(관세율 7%), 냉장고(8%) 역시 각각 5년, 3년 내에 철폐돼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FTA 발효에 따른 즉시·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 중 캐나다의 對세계 수입 1,00만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평균 이상(5.6%)인 품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섬유, 기계류, 일부 농식품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본에 앞서 FTA를 체결하는 만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産 제품과의 점유율 격차를 벌리기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출처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홈페이지>

[AEO 뉴스]

▶ 인천세관 AEO공인기업과 간담회 개최... 지원 약속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박철구)은 7일 관할 AEO공인기업인 삼성전자(주), 현대자동차(주) 등 대기업 22개 업체와 인천화학(주), 두림로보틱스(주) 등 중소기업 7개 업체의 수출입 관리책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2014년 관세행정의 변경사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의 활용 방안, 수출입통관 시 도움이 되는 사항 등을 안내하고 AEO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인천세관은 수입검사율 축소, 화물 우선통관 등과 같은 AEO MRA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국가마다 상이함에 따라 수출입신고과정에서 취해야 할 올바른 절차 등을 약정 국가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등 AEO 수출입 기업에 유익한 정보들을 안내했다.

AEO MRA 체결에 따른 물류촉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AEO 업체가 중국 수출시 통관 소요시간이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62.1%↓)으로, 중국의 AEO업체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국내 통관 소요시간이 5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55.9%↓)으로 각각 6시간 23분, 2시간 54분이 단축됐다.

인천세관은 "올해 멕시코(3월), 터키(6월)와 AEO MRA를 체결해 체결국이 9개국(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멕시코, 터키)으로 늘어나 세계 최다 체결국으로 도약했으므로 관내 수출입 AEO 공인업체가 MRA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 기업이란 수출.입 업체, 선사·항공사,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인, 관세사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재정건정성,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에 성실성과 우수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AEO공인 기업에 수출입 과정에서의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